



국제적 시각으로 본 전쟁 『한국전란1년지』 다시 읽기

옥창준_한국학중앙연구원

| 목차 |

1. 냉정과 열정 사이
2. 『한국전란1년지』의 관점
3. 국제적 시각을 통한 상상력

국제적 시각으로 본 전쟁

『한국전란1년지』 다시 읽기

옥창준_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담론 지형은 냉정해지기 쉽지 않다. 남북한 간 대립을 중심으로 한 냉전적 구조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를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면서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더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 시각을 빌려 한국전쟁을 어떻게 넓게 바라볼 수 있을지 논한다.

1. 냉정과 열정 사이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코앞까지 진격했지만, 러시아군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적 저항은 완강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2024년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 지배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기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영역에서도 전쟁은 진행된다. 전장으로부터 멀리 있는 한국 사회도 이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전쟁 발발 직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에 응해 언론을 중심으로 키예프를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가까운 ‘키이우’로, 2014년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시작한 크림반도의 표기법을 ‘크림반도’로 바꾼 일이 상징적이다. 언어가 사고방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타당하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초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을 ‘침공’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세계 질서

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호사가들이 전쟁의 향방과 전쟁 이후 등장할 미래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을 두고 총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전쟁을 바라보려면 앞으로 지나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전쟁 당사자와 외부 관찰자의 온도 차를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과 우크라이나의 ‘조국수호전쟁’이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식 표현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오랫동안 공유점이 많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러시아와 완전히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인의 열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바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이들은 전쟁이 향후 세계 질서에 미칠 여파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전쟁을 바라보는 내부의 ‘뜨거운’ 시각과 외부의 ‘차가운’ 시각은 그렇게 구분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태도 역시 우크라이나 입장에 일차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외부자의 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1950~1953년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데 적용하면 어떨까.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막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이 기억되는 방식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듯이 냉정하기 어렵다. 특히 전쟁의 직접 당사자였던 남북한이 여전히 분단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둘러싼 기억은 전쟁의 발발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한국인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침략자이며, 전쟁 이후 벌어진 남북한 간 체제 경쟁을 포함하여 어느 쪽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는가에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경험이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의 유산과 영향을 따지는 일은 사치에 가까웠고, 이를 학문의 세계에서 언어화, 의미화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주로 해외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따지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한국 학계가 전쟁의 경험을 정리한다면, 해외 학계는 전쟁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종의 지적 분업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해외 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국제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편의 글에 주목하여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이란 무엇인지를 시론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그럼 시계를 1951년으로 돌려보자.

2. 『한국전란1년지』의 관점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과 관련된 하루하루의 기록은 개인 차원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다. 전선이 급변하는 혼란 속에 기록을 남길 최소한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이후,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전사 편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국방부는 정훈국을 중심으로 전사편찬회(戰史編纂會)를 발족하여 학계 권위자인 이병도(위원장), 김상기(부위원장), 신도성, 이용희 등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편찬에 나선다. 전사편찬회는 미 제10군단 내 한국 부대의 전사를 기록하는 한국군 전사편술부(ROKA Historical Section)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사 편찬 기술을 익혀 나갔다. 그 첫 결과물은 1951년 10월 출간한 『한국전란1년지』(이하 『전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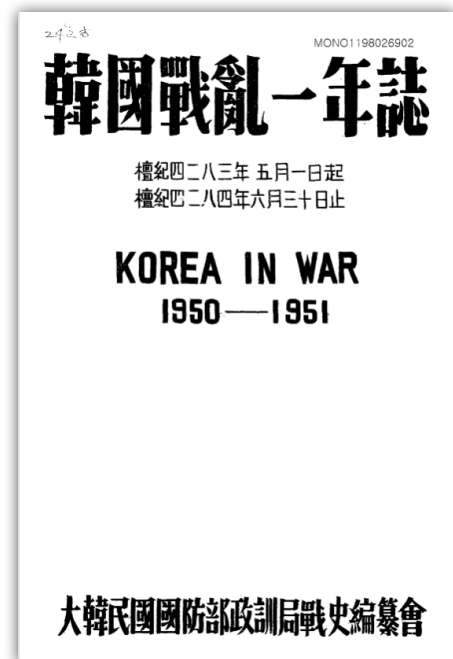
『전란지』는 전투사를 넘어서 전쟁의 종합적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전황과 일지, 국내외 중요 문헌, 통계 및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 부분도 수록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서 전사편찬회 위원을 맡고 있던 이용희가 직접 썼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을 지금의 그 어떤 연구보다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글쓴이 이용희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한국전쟁의 경과를 살펴보자.

1) ‘접선 지대’의 안과 밖

이 글은 1950년 6월 존 포스터 델레스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된다. 국무부 고문인 델레스는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제적 위기에서 한국이 홀로 있지 않다는 점을 천명했지만, 미국은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줄곧 동아시아에서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 이용희의 관찰이다.

미국의 소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미국 방위선,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미국의 방위선으로 공표했다. 애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안보 불안에 휩싸였다. 이용희는 애치슨 라인을 접한 북한과 소련이 이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으리라 속단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한반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것



『한국전란1년지』 표지 (출처: 국회도서관)

일까. 이용희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의 ‘접선 지대’로 정의한다. 그러나 접선 지대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진영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지, 실제 한반도는 이미 지역 나름의 사회·경제적 통일성과 역사·정치적 단일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용희는 외부의 힘에 따라 접선 지대의 통일성과 단일성이 파괴되면, 그 지역의 정치 동향은 외부의 힘을 거슬러 통일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문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접선 지대의 정치 동향 변화가 국제 세력 사이의 비중 변화로 이어지기에, 접선 지대의 분쟁은 그 지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 세력 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한반도 안의 자율적 의지가 한반도 바깥의 타율적 개입을 불러오는 한반도의 정치적 특수성과 “한번 분규가 발생하면 곧 내외가 서로 직통하는 것”이 접선 지대의 특징이었다. 즉 애치슨 라인을 듣고 김일성이 남몰래 환호성을 질렀을 그 순간에도 이미 한반도 문제는 만약 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인만의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이용희는 외부의 힘에 따라 타율적으로 부과된 한반도의 모순을 이해하면서도, 이 모순을 한반도인만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냉정하게 파악했다.

2)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접선 지대인 한반도에서 발발한 충돌은 국제 문제로 비화한다. 침략 이후 거의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된 것은 그 생생한 증거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미가입국이었던 한국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결의안을 채택한다.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퇴를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진격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고, 한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를 맞이한다. 이에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시 개최된다. 이제 미국이 한국 방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6월 27일, 유엔 미국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원조할 것, 대만 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할 것, 필리핀 방어 강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향한 원조 등을 발표했다. 이용희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발한 사변을 단순히 한반도인의 내전이 아니라, 소련이 배후에 있는 세계적 공산주의 침략의 하나로 파악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두고 봤을 때 일종의 대전환이었다. 한반도가 지닌 접선 지대로서의 성격은 미국과 소련의 세계적 대립인 냉전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문제를 국제 문제로 변모시켰다.

미국은 유엔 가입국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제안했다. 한국에 북한의 무력공격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하자는 이 제안은 다수의 찬성 속에 가결되었다. 미국은 국제기구인 유엔을 활용한 집단적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고, 대부분 자유 진영 국가였던 유엔 회원국들은 이 같은 노선을 지지했다. 이어 7월



부산에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 지금은 ‘유엔기념공원’으로 불린다.(출처: Visit Busan)

7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되고, 전쟁에서의 유엔기 사용이 허가된다. 유엔군의 압도적 다수는 미군이었지만, 유엔의 깃발 아래 유럽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총 16개국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다. 이는 국제연합 역사상 유일한 유엔군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독특한 위상을 점한다.

3) 연결된 국제정세

그러나 미국의 노선이 유엔 내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출석하고 있던 인도, 이집트, 유고슬라비아는 늘 소수 의견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막고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조정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두고 미국과는 다른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은 이 문제를 두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한 소련과 협의에 나설 수 있었다. 인도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중재 노력을 표명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조건으로 두고 한국전쟁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 바깥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평화 제안은 당시 정세상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이용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힘주어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쟁이 국제화될수록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문제보다는 늘 당대 국제 정치적 상황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깊이 연동되어 있었다. 또 그는 외교 교섭 과정에 전세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읽어냈다. 북한의 진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소련은 ‘실력을 통한 기정사실’이 수립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기에 평화 제안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또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파견하면서, 향후 발발할 수도 있는 중국의 도발을 막고자 했다. 한반도의 소란을 틈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일종의 나비 효과로 이어진다. 그 이전까지 중국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만(중화민국) 정부는 7월 1일 응원군을 한국에 파병하겠다고 먼저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략이 세계적인 규모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한국전쟁을 국지화하려는 의도에서 중화민국(대만)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핵심 현장은 여전히 유럽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선에서의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만 했다. 이를 통해 이용희는 대만-중국-일본 문제가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유럽과의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결정된다고 파악했다. 한국인, 대만인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한국 문제를 한국만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탈환 이후 전선이 전쟁 발발 이전과 유사해지면서,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이를 기회로 전쟁을 끝낼 것을 타진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38선 돌파의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북한의 침략으로 남북한 경계로서 기능했던 38선이 소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돌파했을 때 소련, 중공이 개입하지 않을지, 이를 통해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 혹은 세계 전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연했다. 전쟁 발발 초기, 소련이 북한의 전격적 진격을 통해서 국제적 경계선으로서 38선이 소멸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듯이, 당시 유엔군도 유리한 전황을 활용하여 38선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38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10월 무렵 중국군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유엔군 내에서 알려진다. 이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11월 원자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4) 아시아-아랍 국가의 역할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원자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확전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미국의 전쟁을 넘어서 소련-미국 간의 전면전을 뜻했다. 이용희는 만약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심 전장은 유럽이 될 것이기에 유럽 국가들이 한국 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아시아-아랍 국가의 역할도 중요했다. 특히 이용희는 영국이 한국전쟁 시기에 분주하게 움직인 원인으로 영연방 내 아시아-아랍 국가의 동향을 언급했다. 아시아-아랍 국가는 한국전쟁을 한반도의 통일을 두고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를 발 빠르게 감지한 영국이 아시아-아랍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1950년 12월 영국 애들리 수상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전쟁 확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했다.

또 아시아-아랍 국가는 유엔 총회 무대에서 한국전쟁의 정전을 목표로 움직였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을 총회 중심으로 통과시키는 등 총회의 역할을 강화하자, 아시아-아랍 국가는 그 기회의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 12월 아프가니스탄, 버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13개국은 정전안을 총회에 건의하라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의했다. 이 13개국은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전 3인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휴전 이후 극동 문제 전반을 다루는 평화회의의 신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극동 문제 전반을 다루는 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아랍 국가는 중공을 평화회의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이들의 제안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휴전과 중공을 포함한 유엔 극동위를 설치하여 여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다시 전선의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중공군의 공세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와 같은 평화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완전한 군사적 승리로 변했다. 중국이 제안을 거부하자,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중국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명시하면서 유엔 총회 무대를 둘러싼 평화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나 1951년을 거치면서 중공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전선은 다시 38선을 중심으로 고착화하였다. 서구 국가들은 한국전쟁의 '실질적 정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앞으로 더 이상의 확전 없이 국지화되어야 하며, 전 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유엔군 역시 38선 부근에서 진격을 중지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 양쪽이 모두 전선에서의 실패를 통해 군사적 승리를 서서히 내려놓는 가운데 정전 회담이 개시되었다. 이용희의 분석은 정전 회담의 개시를 시작으로 끝난다. 이는 1950년 5월부터 1951년 6월까지를 전사 편찬의 시간적 대상으로 본 『전란지』의 방침 때문이었다.

3. 국제적 시각을 통한 상상력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정전 회담의 개시까지, 전쟁을 지근거리에서 체험하면서도 이용희는 이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수많은 언론 보도를 상세히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한국전쟁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는 지금 읽어도 어색하지 않은 놀라울 만큼의 넓은 국제적 시각을 보여주는 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에서 드러난 국제적 시각의 요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만의 것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국인의 희망과 달리, 세계 정세 전반과 연결되는 맥락에서 처리되었다. 특히 중국 문제와의 연동이 중요했다. 영국, 아시아-아랍 국가는 중국의 동향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평화 회담과 정전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전쟁이 국제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었듯이 정전 회담은 이와 같은 여러 세력의 경합과 각축 속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결국 국제적인 힘의 충돌 속에서 한국전쟁은 그 누구도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

1951년에서 다시 지금 한국 사회로 돌아오면, 한국전쟁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인식은 여전히 ‘잊지 말자 6·25’식의 사고방식에 가깝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전이 낳은 부정적 유산이다.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지만, 이후 정치적 대화를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가 도래하지는 못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적(敵)’ 관념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또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만큼, 한국을 구해낸 한국전쟁은 정의의 차원에서 정당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견 자연스럽다.

근래 다시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구도가 대중적 차원에까지 확산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대중적 인식이 경직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다시금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핵 위기 그리고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출처: 국회도서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30년을 넘어선 중국과의 관계에도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감정은 마냥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실의 정치적 관계는 과거를 바라보는 기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냉전 구도가 가시화되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적 관점의 정치 개념이 우세해지면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보다는 누가 우리 적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입장을 투영하여 한국전쟁의 역사를 연역(演繹)하여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재를 통해 과거를 보는 오류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한국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한다. 한국전쟁이 한국인에게 국가와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세계가 한반도의 두 국가를 구원한 측면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를 구한 측면, 혹은 세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질문을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세계 속에 중요한 국가가 되어가는 만큼 한국만이 아닌 국제 질서의 차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점에 대한 착목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새삼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한국전쟁의 비극이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었다는 관점이다. 냉전 질서의 측면에서 어떻게 미국과 소련이 한국전쟁의 격화를 절제하고 관리했는지, 그 배후에 작동한 국제적인 힘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단 한반도라는 전장을 넘어서 유엔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무대, 또 늘 국제 정치의 핵심 현상이었던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시좌에 두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국제적인 힘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반드시 유라시아 대륙과 대서양, 태평양을 넘나드는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제2의 한반도’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움직인 여러 차원의 평화운동을 기억하는 것이다.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생생하게 알 수 있지만,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에 맞서는 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선명하던 당대 세계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극에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고민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유럽인은 평화운동을 조직했고, 여성운동의 대표들은 한국전쟁의 진상을 조사하고자 직접 한반도를 밟았다. 또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국제 정치의 기본 원리인 동맹 정치를 비판하면서, ‘비동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고민했다. 이와 같은 평화운동이 국제 정치 영역에도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전쟁은 한국인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지만, 또 다른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을 수 있게 한 모두의 경험이 되었다.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평화를 상상할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가 경험한 한국전쟁 ‘들’을 더 넓게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더 넓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머나먼 한반도에 파병을 결정

한 여러 국가의 국제 정치적 의도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인간적 차원의 유대감 형성 등도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의 ‘국제’를 꼭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하는 대문자적(International) 의미가 아니라 소문자적(inter-national) 의미로 이해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각 국가가 한국 전쟁에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다. 우리만의 서사를 고집하면서 기억을 둘러싼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세계인과 소통 가능한 의미를 발굴해낼 것인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와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국제적 시각은 전쟁을 새롭게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길잡이이다. 이미 70년 전에 한국의 한 지식인이 자료의 부족함에도 이와 같은 성취에 일정하게 도달해 있었다는 점을 통해 감안할 때, 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할 수 있다.¹

1 『한국전란1년지』(1951)에 발표된 글은 「6·25 사변을 에워싼 외교」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주 이용희 전집 제4권: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연암서가, 2017)에서 좀 더 읽은 좋은 판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옥창준 |

냉전사와 학술사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만나면서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넓혀갈지, 세계 속의 한국학이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냉전의 지구사』(2020)를 함께 옮겼으며, 『한반도 국제관계사의 재인식』(2021)을 함께 썼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제60호**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 제61호**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

제62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제63호 중국 청사 편수(淸史編修)의 최근 상황

제64호 윤학자 공생재단-아동 보호와 한일 공생의 95년